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무안 지정 초읽기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문의미·전망

이전 기간 단축 등 비공개 집중 논의
市 “내년까지 주민 투표 절차 마무리”
중전 부지 ‘미래형 실리콘밸리’로 개발
금지사 “공항활성화·서남권 발전 총력”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 간 공동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무안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교통국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회의의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는 논의 수준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이날 발표한 정부와 지자체 간 공동 합의문에는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이 담겼다”며 “발표문에 ‘무안 이전 확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확정적이라면 무안군이 이 협의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무안군의 유치 의사와 관련, “오늘 사인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오늘, 내일이라도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다”며 “예비이전후보지는 무안군 동의 없이도 발표가 가능하고 이후 이전계획 수립, 이전심의위원회 심의, 주민투표, 유치의향서 제출 등을 거쳐 최종 이전후보지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문제가 정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간 6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룬 가운데 김영선 광주시 통합교통국장이 17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에서 합의 내용과 후속 조치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같은 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광주시·전남도 제공>

광주시는 올해 안에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국방부에 소속한 절차 진행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김 국장은 “국방부에 가급적 연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다만 오늘 합의문에는 세부 절차의 시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주민투표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지금까지 논의가 상당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내년이나 2027년 초까지는 이전 부지가 확정될 거대하고 있다”며 “대구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최종 확정까지 3년11개월이 걸렸지만, 우리는 1년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6자 협의체 비공개 논의에서 사업기간 단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김 국장은 “비공개 논의의 대부분은 사업 추진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였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11년은 너무 길다’고 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기간을 대폭 줄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민간공항 이전 시점에 대해 김 국장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민간공항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추진된다는 점은 오늘 발표문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KTX 2



단계 개통 시점은 2027년 말로 제시됐다.

또한 김 국장은 광주시가 제시한 1조원 규모 지원 방안에 대해선 “지금 당장 발표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재원 분담 비율이 특별법에 그대로 담기지 않는 것”이라며 “사업 계획을 만들아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금액을 산정한 결과가 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국장은 “광주시 부담은 1천500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는 기부 대 양여차액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데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중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래형 실리콘밸리’ 구상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과거 중전부지 개발 관련 용역을

실시했으나 지금하고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 새롭게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대통령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안된다’고 언급한 만큼 광주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고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미래형 실리콘밸리로 만들어가겠다는 게 지금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사업 총사업비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이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비용을 다시 산정할 것”이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원 방안을 용역을 통해 구체화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어 “광주와 전남, 무안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향한 문이 활짝 열렸다”며 “전남도와 무안군이 힘을 합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서남권 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8년 동안 막혔던 문제가 오랜 세월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1조원의 사업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가사업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하라는 지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가산단을 제외하고 어림잡아 5천억원 이상이 무안군에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 합하면 1조원이 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회의에서) 기재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국방부도 공항 건설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압축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공동 발표문에 市 주민지원자금 1조원 명시

무안군 지원 내용·규모 관심

국가농업 AX플랫폼·항공 MRO센터 등
정부 ‘획기적 인센티브’ 5천억 투입 전망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에 따라 이뤄지는 무안군에 대한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 내용과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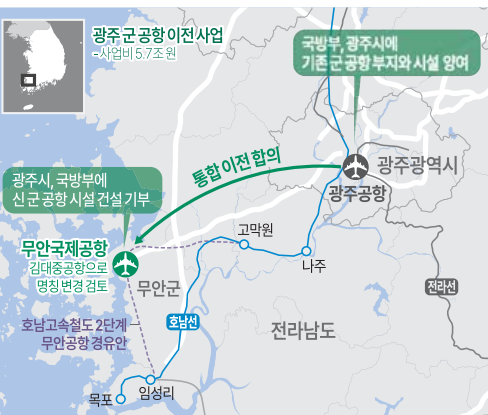
대통령실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전남도가 공항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광주시는 무안군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조를 포함해 총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확한 자금 조성 방안은 향후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공개된다.

전남도와 정부는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무안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지정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군·민간공항 전남 무안 통합 이전 합의



- 합의 주요 내용
- 1 광주시, 무안군에 1조원 규모 지원 등 지원
 - 2 전남도 정부, 무안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 기반 조성, 기업 유치 등 추진
 - 3 정부, 호남지방항공청 신설을 무안국제공항→김대중공항으로 명칭 변경 검토
 - 4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 조속히 이전 지원
 - 5 정부, 영주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협력
 - 6 무안군, 광주 군공항의 무안이전을 위한 절차에 협조
 - 7 정부 주관 아래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6자 협의체 운영
- 연말뉴스 자료: 광주광역시

또한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공항청을 신설하고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을 조속히 이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무안군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한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원 지원 구제화,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 3대 전제조건이 모두 수용된 셈이다.

그동안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지역 발전을 위한 합당한 보상을 담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장해왔는데 정부의 패키지 지원으로 약 5천여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지원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라는 질문에 “합의문에 국가농업 AX 플랫폼 등 약 5천억원 사업이 언급돼있다.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며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가농업 AX 플랫폼 등 첨단 농업 기반 조성과 함께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단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계획이다.

우선 내년 국가농업 AX 플랫폼 관련 예산 반영 사업은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총사업비 450억원)와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총사업비 400억원),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총사업비 300억원) 등 총 1천150억원 규모다.

또 무안국제공항 인근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등 항공관련 산업을 비롯해 항공·물류·주거·교육 기능이 융합된 배후 신도시 ‘미래 첨단 에어로 시티’ 조성 등도 추진한다.

/영사원기자

‘12월17일’은 공항 문제 ‘운명의 날’(?)

‘2023년 12월17일’ 시·도지사 큰틀 합의
2년 만인 ‘2025년 12월17일’ 6자 협의체
당초 5일 예정→일정 조율 ‘17일’ 확정

‘12월17일은 운명의 날?’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과 관련, ‘12월17일’이란 날짜가 회자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을 빚었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이전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시점이 공교롭게 정확히 2년 전인 ‘2023년 12월17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엔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함평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전남도와 불편한 상황이 이어져온 상황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023년 12월17일 나주혁신도시에서 회동을 갖고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등 5개 항에 전격 합의, 통합이전의 물꼬를 텄다.

6자 협의체 첫 회의가 12월17일에 열린 것도 눈길을 끈다. 당초 대통령실 주도 6자 협의체 회의는 이날 5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었다. 하지만 관련 부처 장관 일정 조정 등을 이유로 연기된 날짜가 우연치 않게 12월17일로 잡혔다.

이와 관련, 강기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난 자리에서 “11월19일 4자(광주시·전남도·무안

군·대통령실) 협의 당시 12월5일에 6자 TF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장관 일정 조율 문제로 날짜를 다시 맞추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2년 주기로 12월17일마다 군공항 이전 관련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하늘이 점지한 운명적인 날’ 아니냐는 ‘즐거운 해석’도 내놓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연혁

- ▲2007년 11월 무안국제공항 개항
- ▲2011년 1월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 통합 추진’ 고시
- ▲2014년 10월 광주시,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건의
- ▲2016년 8월 국방부, 광주군공항 이전 적정 승인
- ▲2018년 8월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민간공항 통합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
- ▲2020년 12월 광주시,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 파기
- ▲2023년 5월 군공항이전 추진 전남·광주 공동 발표문
- ▲2023년 6월 광주시, 군공항 유지지역 지원방안 발표
- ▲2023년 12월 통합이전 추진 광주·전남 공동 발표문
- ▲2024년 7월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회동
- ▲2025년 4월 제2대 대선 공약 반영 건의
-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탄원서 중 6자 TF 구성 지시
- ▲2025년 11월 대통령실 광주·전남·무안 4자 사전협의
- ▲2025년 12월 6자 TF 출범·공동발표문 체결

김산 군수 “군민 납득할 합리적 방안 도출 노력”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해야”

김산 무안군수는 17일 “앞으로도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TF) 실무 협의에 성실히 참여해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열린 대통령실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 회의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산업 추가 발굴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이번 회의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각 주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논의 과정에서 군민의 삶과 무안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며 “특히 무안군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재개항이 불확실한 무안국제공항을 조기 정상화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없애고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신속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향후 논의의 결과에 대해 군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무안군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안=김상호 기자